
문서번호 : 08-0704-1

발 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대체복무 “원점서 재검토” 보도에 대한 연대회의 성명 보도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오늘자 뉴스보도에 따르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작년 9월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 대체복무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국방부 및 정부 관계자가 발언했다고 합니다.
4. 비록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에 보도된 언론 내용은 현 정부의 병역거부 문제, 더 나아가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저급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단순히 대체복무를 둘러싼 정부 내부의 이견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약속했었던 것을 아예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5. 이에 연대회의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며 인권의 시계를 뒤로 되돌리는 꿑꿑이를 당장 그만두고 전 정부에서 시작한 법안을 좀 더 인권적 시각에서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미 제출된 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아예 8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정부가 뒤로 숨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며 아직도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6. 오늘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은 대체복무제도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

일시 : 2008년 7월 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

<순서>

경과보고 : 여욱(전쟁없는세상)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

- 노회찬(진보신당 공동대표)
- 임종인(변호사, 전 국회의원)
- 나동혁(병역거부자, 2005년 출소)
- 김수정(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김정대(신부, 천주교 남자수도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위원장)
- 정진우(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 이석태(변호사,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성명서 낭독 : 이 영(민주화운동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④ 문의 : 여욱(전쟁없는세상, 010-5183-0036) / 최정민 (연대회의, 017-311-4245)

경과보고

2001년 초 :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문제 본격적으로 제기

2001년 12월 :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 씨의 병역거부 선언

2002년 2월 : 연대회의 결성

2004년 5월 :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 병역거부자에 대해 최초 무죄선고

2004년 7월 : 대법원 병역거부자 2명(최명진·윤여범)에게 유죄판결

2004년 8월 : 헌법재판소 병역법 합헌 결정

2004년 9월, 11월 : 병역법 개정안 발의 (임종인, 노회찬 의원)

2005년 12월 :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결정

2006년 4월 : 국방부 대체복무연구위원회 발족

2006년 12월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최명진, 윤여범 씨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07년 9월 : 정부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 허용방침 발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은 대체복무제도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우려했던 일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한 오늘자 뉴스보도에 따르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 “국방부가 작년 9월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 대체복무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비록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에 보도된 언론 내용이 단순히 현 정부 내부의 시각차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추진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반세기 넘도록 13,000여 명 정도의 전과자를 양산했고 지금도 한 해 700~800여 명의 젊은이가 전과자가 되어서 감옥을 나서게 되는 병역거부의 문제는 2001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인권사안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2000년 초반 해도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는 그 단어조차 생소했지만 이제는 논술이나 사법시험의 단골 주제로 출제되고 상업영화의 소재로 등장할 만큼 널리 알려진 주제가 되었다. 그 만큼 많이 논의되었고 또 여론조사도 많이 되었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물론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간 징병제의 무원칙한 운용으로 시민적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양심을 이유로 젊은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랬기에 작년 참여정부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복무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을 때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국민여론이 증가했다는 근거를 들기도 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니 이것은 국민여론이 바뀐 게 아니라 정부의 시각이 죽어도 못해주겠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한 슬로베니아 대표의 질문에 “한국 정부는 작년 9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시민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새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현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올해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5월과 7월, 불과 2달 사이에 국민의 여론이 얼마나 확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으로 자랑스런 한국인을 반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병역거부라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뭔가 씁쓸한 풍경이다. 정부는 인권의 시계를 뒤로 되돌리는 공공이를 당장 그만두고 전 정부에서 시작한 법안을 좀 더 인권적 시각에서 효과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제출된 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아예 8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행보는 당장 그

만 두어야 한다. 만약 아직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정부가 뒤로 숨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이며 아직도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2008. 7.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